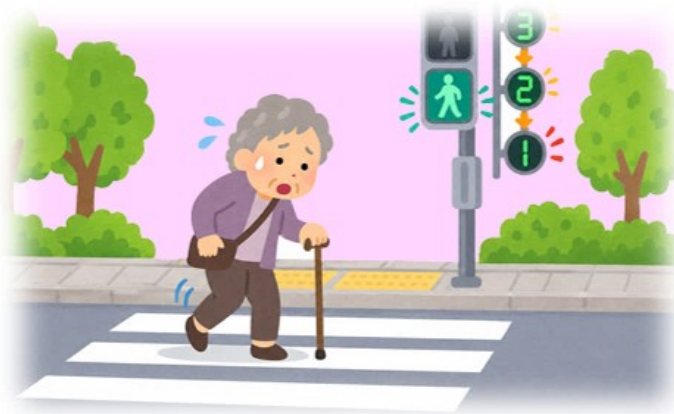


재난은 모두에게 똑같이 닥치지 않습니다

재난 상황에서의 노인 인권*



*출처: 국가인권위원회, 『사람답게 사는 세상 이야기 인권』(통권 165호, 2026 07+08 『재난 상황에서의 노인인권』)



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, 폭우, 대형산불 등 재난 상황에서 노인은 더 큰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.

노인이 재난에 더 취약한 이유는 단순히 '나이' 때문이 아닙니다.

△이동 및 재난정보 접근의 어려움 △혼자 사는 생활환경 △돌봄과 사회적 관계망의 부족 이러한 조건들이 겹치면서 재난의 위험은 더 커집니다.



긴급재난문자를 보냈다고 정보가 전달된 것은 아닙니다.

글씨가 잘 보이지 않거나 휴대전화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,
마을 방송을 듣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정보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재난 정보는 문자뿐 아니라 전화, 방송, 방문 안내와 이웃 연락망을 통해
실제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


대피 안내는 대피하라는 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.

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**이동을 도울 사람과 차량 등 실질적인 지원**이 필요합니다. 대피를 망설이는 경우에는 **평소 신뢰관계가 있는 이웃이나 마을 관계자**가 위험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.



대피소에서도 존엄은 지켜져야 합니다.

기존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고 낯선 공간에서 생활해야 한다면
건강과 생명을 다시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.

대피소에는 **이동하기 편한 공간과 의료지원**이 마련되어야 하며,
평소 받던 돌봄도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.



재난 이후의 삶까지 고려되어야 합니다.

삶의 터전과 이웃, 익숙한 병원과 복지관을 잃으면 재난 이후 노인의 일상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.

지원금 신청을 돕고, 주거·의료·돌봄을 지원하며, 회복 과정에서 노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. 심리적 회복과 공동체 복원까지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.



노인 또한 재난 대응의 권리 주체입니다.

재난 상황에서도 노인에게는 △정보를 이해할 권리 △안전하게 대피할 권리
△돌봄과 의료를 받을 권리 △회복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.

가장 취약한 사람을 살피는 재난 대응이 모두에게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듭니다.

그 누구도 재난 앞에
홀로 남겨지지 않기를

경기도 인권센터는

경기도 및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, 도 출자·출연기관,
도 사무위탁기관,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
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
인권침해에 대해 상담·조사·권고를 합니다.



031-8008-2340 (031-120-ARS 2번+6번)



오전 9:00~11:30, 오후 13:00~17:00



gghrc@korea.kr



www.gg.go.kr/humanrights